

국무조정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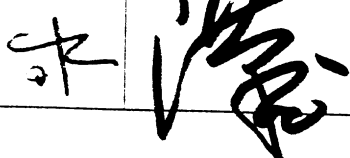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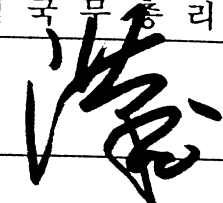
우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전화 720-2015 /전송 733-1856
 외교안보심의관실 과장 : 정기창 사무관 : 김용수

문서번호 국무총괄 33040-30

시행일자 2001. 1.

수신 수신처 참조

참조

보존기간	년	국무조정실장	국무총리
공개여부			
조정관	김영수		
심의관	이영호		
과장	정기창		
기안자	★김용수		
심사자		심사일	협조

제목 노근리사건 후속조치 관련 지시(국무총리지시 2001 - 6 호)

1. 정부는 지난 1년여동안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조와 한미간 공조체제 하에서 범정부적으로 지혜를 모아 마련한 「노근리사건」 진상조사결과와 관련 대책을 2001. 1. 12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불철주야 노력하신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이제 노근리사건 조사결과와 대책이 발표됨에 따라 노근리사건 「대책단」, 「진상조사반」, 「자문위원회」는 임무가 종료되어 해체하고, 향후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업무성격에 따라 소관부처가 별첨 「후속조치계획」을 참고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첨부 : 노근리사건 후속조치 추진계획 1부. 끝.

국무총리

수신처 : 가 42, 가 44, 가46~47

노근리사건 조사결과 및 대책발표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

2001. 2

국무조정실

노근리사건 후속조치 추진계획

- 2001. 1. 12 노근리사건 진상조사 결과 및 관련대책 발표로 정부의 노근리사건 「대책단」(단장: 국무조정실장), 「진상조사반」(반장: 국방부 정책보좌관), 「자문위원단」(위원장: 백선엽)은 일단 임무가 종료되었으므로 해체
- 후속조치사항들에 대해서는 업무성격에 따라 소관부처에서 담당 추진
 - 추모비 건립 및 장학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외교부가 미측과 추가적인 실무협의를 하고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에서 세부 추진계획 수립·시행

가. 정부대책단 등 관련기구 해체

- 정부의 「노근리사건 대책단」 및 「진상조사반」 해체와 함께 「자문위원단」 활동 종료
- 사후대책 세부사항에 대한 한미간 추가적인 실무협의, 추모비 건립 및 장학사업 등 구체적인 사후 세부조치사항은 기능별로 소관 부처에서 추진계획 수립·시행

나. 한미간 합의된 사후처리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실무협의(외교부)

- 추모비 건립 관련
 - 건립장소 및 비문문안 확정, 사업비 인수, 추모비 건립 추진 주체 및 추진방법 등에 대한 한미간 협의 종결
- 장학사업 관련
 - 전체적인 장학사업(continuous multi-year program)의 규모 및 기간, 장학사업 운영 및 장학생 선발방식 등 협의
 - 1차년도 장학사업 기본방침(사업비 75만불)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

다. 추모비 건립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수립(행자부)

- 추모비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사업규모, 건립장소, 비문내용, 추진일정 등

라. 장학사업 세부 운영계획 수립 추진(교육부)

- 장학사업 운영위원회 구성, 장학생 선발기준 및 우선순위, 사후 관리방법 등

마. 피해자측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요청 관련, 정부방침 검토(외교부)

- 피해자측의 요청에 대한 법률적 검토 및 우리정부 입장 정립, 피해자측에 대한 설명논리 정리 등

바. 피해주민의 접촉창구 및 관련 동향파악, 유관기관 협조 대처(행자부)

- 피해주민의 건의사항 접수 등 접촉창구 및 관련기관 통보
- 지방자치단체, 경찰관서 등을 통하여 피해주민과 시민단체 등 동향을 파악하여 관계기관에 통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협조

사. 유사사건 제기시 처리방침

- 유사사건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원칙적으로 견지
 - 노근리사건처럼 피해규모가 크고 관련자의 증언과 물적증거가 제시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도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물적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소규모 유사사건에 대해서는 사실확인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
 - 다만 중대하고도 명백한 물적자료가 제시될 경우 우리정부 차원에서 1차 검토한 후 필요시 미측과 협의
- 유사사건 관련민원이 제기될 경우 일단 별도의 조사계획이 없음을 통보
 - 다만 정부 내부적으로는 전사연구 및 관련자료 정리차원에서 검토

＜부처별 후속조치업무＞

소관부처	후속조치 업무	협조(관련) 기관
국무조정실	○ 후속조치 추진계획 수립, 시달 - 총리 명의로 관계부처에 지시	
외교통상부	○ 사후대책 세부사항에 대한 한미간 실무협의 ○ 피해자측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요청관련, 정부 입장 정립 및 법률적 검토	법 무 부
행정자치부	○ 외교부를 통한 한미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추모비 건립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추진 ○ 피해주민의 접촉창구 및 관련등항 파악, 유관 기관 협조 대처	외교통상부
교 육 부	○ 외교부를 통한 한미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장학사업 세부운영계획 수립추진	외교통상부
국 방 부	○ 노근리사건 조사관련 자료의 공개요청시 조치 ○ 유사사건 제기시 민원 처리	